

[종합·해설]

■ 정치권 정계개편론 불붙나



김근태 의장 경찰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25일 오전 강원경찰청 기동1중대를 방문, 식사중인 의경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강재섭 대표 군대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25일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훈련병과 함께 충격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 통합론’ 물밑 기류 활발

‘대통합론’을 기치로 내건 범여권 진영의 새판짜기 움직임이 심상찮은 진동음을 울리고 있다. 지향점은 대동소이하다. “이대로는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여당과 고건 전 총리, 민주당, 진보세력 등 반(反) 한나라당 세력들을 ‘해체모여’ 형식으로 재편, 하나의 큰 틀로 묶어내는 그림이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 보면 정계개편을 주도할 핵심세력들의 쉼범이 제각각이어서 관짜기의 주도권과 방법을 둘러싼 물밑 신경전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대통합 움직임은 먼저 여당에서 움직이는 분위기다.

지도부, 고 전총리 등과 잇따라 접촉을 갖고 이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계개편 논의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는 추미애 전 민주당 의원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의원은 “정치가적 의미는 없었다”고 밝혔다.

외부로 문을 여는 동시에 여당은 내부적으로는 대선주자군을 중심으로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공동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동지라는 공감대가 자리잡고

“이대론 공멸... 뭉쳐야” 공감 형성 與 원로중진들 ‘신당론’ 불지피기

이미 ‘작업’도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당 지도부가 반공계적으로 대통합론의 군불때기에 나선 것과는 별도로, 원로 중진그룹들이 대통합론의 공감대 확산과 방향 설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대철 상임고문은 ‘대통합론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며 ‘신당론’을 적극 추종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 고문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당과 민주당, 고건 전 총리 등을 아우르는 대통합 신당을 추진해야 한다”며 “조만간 노 대통령을 만나 이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 등 여당 지도부는 물론 민주당

있는 분위기다. 여당의 영입대상 1순위로 고 전총리는 지난 12일 김한길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여당의 통합론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했지만 이는 일단 추후 정계개편 논의에 대비하려는 전략적 제스처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 전 총리측은 이번 주부터 여야 정치인들을 중점적으로 접촉하며 독자적인 중도실용개혁세력 통합론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역시 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들거리 전략’을 취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탐색전에 몰두하고 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한-뉴라이트 연대 본격화?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진영간의 주파수 맞추기 작업이 본격화된 느낌이다. 정계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와중에 어느 쪽이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김진홍 상임의장이 25일 한나라당 수요모임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3.4월께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계개편의 연대 계획을 밝

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범보수의 결집을 위해서는 합리적 보수, 온건보수를 표방해온 뉴라이트와의 접촉을 통해 외연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고, 제도권 외곽에 있는 뉴라이트 진영은 정치적 영향력이 큰 한나라당을 지렛대로 자신들의 이념을 관철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나라당과 범뉴라이트 진영의 연대 공고와 과정에는 적잖은 시련도 예상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뉴라이트 진영 내부

“범 보수연합으로 이념 관철” 교감 제휴 탐색 시도...성사까진 시련 예상

하고 나선 것은 한나라당과 뉴라이트가 ‘밀월관계’에 접어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최근 정계개편과 관련한 각종 시나리오가 정치권 안팎에서 붕괴 터지듯 쏟아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과 이념적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뉴라이트와의 연결고리를 활용, 본격적인 정계개편에 대비한 ‘우익보강’에 나선 듯한 형국인 것. 정치권 이합집산의 키워드가 ‘민주개혁세력 통합론’ 내지 ‘범보수연합’ 등 이념적 지향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과 뉴라이트의 제휴 움직임도 결국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

에서도 미래에 대한 비전에서 상당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뉴라이트의 또 다른 한 축인 자유주의 연대는 이날 ‘뉴라이트-한나라당 연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서를 내 아직까지 분위기와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김 상임의장의 입장은 전체 뉴라이트의 의견이 아니다. 일부 후발 단체들의 자의적 정치행위”라며 “한나라당도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탐나다고 해서 단기적 필요에 의해 이를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해 향후 ‘한-뉴라이트’ 연대가 진통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8만 군민 모두가 참회해야 합니다”

화순Y, 군수 보선 앞두고

군민·정치권에 자성 촉구

“8만 군민 모두가 반성하고 참회할 것을 호소합니다.”

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화순지역 한 시민사회단체가 군민들과 정치권에 그동안의 투표 행태와 후보자 공천에 대한 자성을 촉구 하고 나섰다.

화순YMCA는 25일 최병근(변호사) 이사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화순군은 민선자치 이후 10여년동안 세 명의 군수가 출몰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불명예와 함께 또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화순이 이처럼 참담한 나라으로 추락한 것은 선거 때마다 인맥의 위세와 돈을

앞세워 지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오로지 권력 장악에만 열안이 했던 사람들 때문”이라며 “군민들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화순YMCA는 이어 “군민들도 진정으로 누가 군수에 적합한 인물인지, 이성과 양심에 의한 판단을 소홀히 해 온데 대해 통렬한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10·25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성명은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군수를 공천한 민주당도 질서와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신중히 공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순YMCA는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임호경 전 군수의 부인이 군수에 당선된 데 이어 전형준 전 군수의 동생이 공천을 신청, 선거전이 ‘대리전’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DJ “美, 한국 동맹국으로 대접해줘야”

이미티지 미 전 국무 차관 접견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25일 리처드 이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우리 국민은 미국에 협력하고 있는데 이라크에 파병도 하지 않은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맹국으로서 일본, 프랑스, 독일과 같이 한국을 대접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대표 장성민 전 의원)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이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앤드루 카트 전 백악관 비서실장 일행의

예방을 받고 “우리는 월남,이라크 파병, 미2사단 용산기지 이전, 한미FTA에 협조하고 있다”며 이미티지에게 최정호 비서관이 전했다.

DJ는 최근 언론 인터뷰와 대학 강연 등을 통해 미국과 일본 내 우파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한국 대접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미티지 부장관은 “미국 내에서 ‘한국이 은혜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미국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전 책임론’과 관련해서도 “미군 철수가 조기에 이뤄졌고 애초는 라인도 실수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작통권 이양 신중해야”

이미티지, 서울 세미나서

리처드 이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5일 “전시 작통기계를 한국에 이양하는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주최 토론회 연설을 통해 “작통권 협의가 다소 감정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작통권을 이전하게 되면 한국에 두 개의 사령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방위력과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통일성이 중요하다. 하나가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공노 사무실 폐쇄 중지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부 사무실 폐쇄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는 25일 구청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 사무실 강제 폐쇄와 전공노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광산지부도 이날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으며, 서부지부는 26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공노 전남지역본부도 25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와 비이성적인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Kwangju Sangmu Night' (광주 상무 나이트) featuring Kim Beom-tong (김범통) and a list of participating venues and dates (9/28, 29, 10/11, 12). Includes a '부킹천국 100%' (Booking Paradise 100%) slogan.